

# 천장 뚫린 환율, 달러 초강세 지속... “1400원 시간문제”

美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 가능성  
환율 13년 4개월만에 1350원 돌파  
유로·위안화 추가 약세시 1400원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3원 오른 1,345.9원으로 장을 마쳤다. /뉴시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하반기에 140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7.3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다. 전일 장중 1352원 돌파 이후 하루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운 것이다. 2009년 4월 29일(장중 1357.5원) 이후 13년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잭스홀 회의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2%)로 되돌릴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며 “물가 안정에 실패하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과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데이튼 연설에서 “연준이 내년에 연방기금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서는 내 시각은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20~21일 열린다. 미 연준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해 금리를 2.25~2.50% 수준까지 올렸다.

이처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하반기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유로화와 위안화의 추가 약세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둔화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단을 1370원으로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강달러에 중국과 유럽 약재가 중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도 14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고환율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는데 이 수준까지는 못

마치더라도 국내 상황에 따라 환율이 1400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보유액 역시 줄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4개월(3~6월) 간 234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7월 들어 증가하기는 했지만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당국은 관계자는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 시장안정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대책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통화 긴축(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현재 2.50% 수준이다. 시장에선 연내 두 번 남은 한은 금통위에서 0.25%p씩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 연말 연 3.0%에 이를 전망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과도한 공정거래 형벌규정, 재검토 필요”

“담합 外인 행정제재로 전환”  
“주요국 비해 지나치게 규정”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의 일부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남선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 국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

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대학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면,  
그런 생각을 왜 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만나는,  
“압도적 실체를 가진 글로벌 유니버스”

이것이 바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세계적 세계관**

국가가 신뢰하는 명품대학 BUFS

**BU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해외 취업률·취업자 수 8년 연속 전국 1위 (2014~2021 12월 대학 정보 공시 기준)

교환학생 비율 전국 1위 (2019 중앙일보 대학 평가)

외국인 교원 확보수준 전국 사립대 기준 1위 (2022 QS Asia 대학평가)

외국인 학생수 부문 부울경 사립대 기준 1위 (2022 QS Asia 대학평가)

종합평가 부산 사립대 기준 1위 (2022 QS Asia 대학평가)

재학생 6명중 1명은 재학중 외국 체험

**2023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원서접수**  
2022.9.13.(화) ~ 17.(토) 18:00까지

문의 Tel. 051)509-530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